

# 씨 마른 총장직선제... 10곳 중 7곳 법인이 단독 임명

## ‘사립대학 총장 선출 실태’ 분석

간선제 ‘총추위 통한 선출’ 順  
‘총추위’에도 법인 영향력 커  
총장직선제 근거 조항 위한  
사립학교법 등 개정 필요

(138개 사립대 총장선출 제도 현황)

총장선출방식	내용	대학 수	비율
완전임명제	법인이 직접 임명	99	72%
직선제	구성원 선출·추천, 이사회 임명	7	5%
간선제	총추위 등 복수추천, 이사회 임명	32	23%

/자료=박경미 의원·교육부

국내 사립대 10곳 중 7곳 이상에서 법인이 단독으로 총장을 임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화여대와 성신여대가 총장 선출 방식이 직선제로 바뀌면서 대학가에서 총장을 구성원이 직접 뽑아야 한다는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총장 직선제 확대를 위해서는 법개정은 물론 직선제 부작용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사립대 72% “법인이 총장 단독 지명”

9일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사립대학 총장 선출 실태 조수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138개 사립대 중 대학 구성원이 참여하지 않은 채 법인이 직접 총장을 임명하는 대학이 99곳으로 71.7%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 가운데 남부대의 경우 이사장이 총장을 임명하면, 이사들이 승

인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이사장 1인이 단독으로 총장을 선출한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교수와 교직원, 학생 등 대학 구성원이 총장 선출에 관여하는 대학은 직선제 7개교, 간선제 32개교로 전체 사립대 중 28%(39개교)에 불과했다. 이들 대학을 구체적으로 보면, 직선제 7곳 중 교수·직원·학생이 모두 직접선거를 하는 곳은 2곳이고, 나머지 5곳은 일부 구성원이 선거에 참여하지 못한다. 직선제 대부분 직접선거로 2명 이상을 총장후보자로 선출하면 이사회가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고, 1곳만 직접선거로 1명을 선출한다. 간선제 방식으로는 ‘총장선출위원회’를 선출한 뒤, 선출위원의 간접선거로 총장

후보자를 뽑는 대학이 1곳이었고, ‘총장추천위원회(총추위)’ 등을 통해 선출하는 대학이 31곳으로 법인 임명제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총추위에서 총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대학 27개교 중 법인 이사가 총추위에 직접 참여하는 대학이 19개교에 달하는 등 법인이 총장 선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대학이 대다수였다. ◆총장직선제 대학, 교수 비중이 절대적 학교 구성원이 직접투표를 통해 총장을 선출하는 총장직선제를 시행하는 사립대는 7곳(5%)에 불과했다. 이들 대학 대다수는 투표에 참여하는 선거인단 중 교수 비중이 70%를 훌쩍 넘어 교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직원과 학생 등 대학구

성원 전원이 투표에 참여하는 대학은 성신여대와 이화여대 두 곳뿐이다. 조선대의 경우는 교수와 직원은 전원 투표에 참여하나 학생은 선거권자를 별도로 정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대구대는 교수회와 직원대표 협의를 전제교수회의 동의를 거쳐 교수와 직원을 참여하도록 하고 있고, 숙명여대와 한국외대는 교수만 선거에 참여한다. 한성대의 경우 교수와 직원이 참여하되 직원의 표는 3분의 1로 제한된다. ◆교수 중심 직선제 선거과정·파벌 우려 교수 중심 직선제는 다른 구성원의 참여가 배제되거나 제한됨에 따라 파벌 조성이나 논공행상 등 기존의 교수직선제에서 나타났던 폐단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학 총장 직선제는 1987년 민주화 바람을 타고 국내 대다수 대학에 도입됐으나, 선거 과정이나 교수 사회 파벌 조성 등 부작용이 제기됐고, 법인 임명이나 간선제 등으로 바뀌었다. 이에 총장 직선제가 도입되면 이런 부작용을 없애기 위한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국립대의 경우 지난 정부가 재정지원 사업 평가에서 총장 직선제 대학에 불이익을 주거나, 총장 임명을 미루는 등 총장

직선제를 막아왔으나, 문재인 정부 들어 국립대 총장 임용 개선방안을 발표하는 등 총장직선제를 허용해 군산대 등에서 총장직선제가 부활했다. 사립대의 경우 총장 직선제가 확대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화여대의 경우 지난해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로 총장 등 교수진이 구속되는 사태를 겪으면서 개교 131년 만에 처음으로 총장 직선제로 전환했고, 심화진 총장의 교비 횡령 혐의로 법정 구속되는 사태를 맞은 성신여대가 총장직선제로 새 총장을 뽑는 학내 내홍과 동반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총장직선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교수 파벌 조성 등 부작용을 없앨 수 있는 방안과 함께 현행 법인 이사회 정관 개정을 위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에 총장직선제 근거 조항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박경미 의원은 “총장직선제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부 문제로 인해 대학 구성원의 직접적인 참여 자체가 부정대서는 안 된다”며 “총장추천위원회를 통해 간선제로 선출하는 경우라도 대학 구성원들이 적정 비율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법인과 법인 관계자의 총추위 참여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학생·장애인 대상 교사 성범죄 ‘엄벌’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 개정안  
성비위 2차 피해 징계기준 신설



교육부

앞으로는 교육공무원이 성범죄를 저지른 뒤 피해자에게 정신적·신체적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에도 징계가 내려지는 등 교사 성비위 징계 기준이 강화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교육공무원 징계령’과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되는 교육공무원 징계령은 시도교육청이 설치하는 일반징계위원회 위원수를 ‘9인 이상 15인 이하’로 늘리고, 회의는 징계 사안마다 특수성을 고려해 위원장과 위원 6명이 진행하도록 했다. 기존 시행령은 위원 수를 ‘5인 이상 9인 이하’로 정하고 회의 방식에 대해 별도 규정을 두지 않았다. 성범죄에 대한 징계사유 조사와 징계 의결 요구 과정에서 전문가 의견도 의무적으로 듣도록 했다.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피해자에게 정신·신체적 2차 피해를 준 경우에 대한 징계 기준을 신설하고, 이를 징계 감경 제외 대상에 추가했

다. 기존 시행규칙에는 2차 피해와 관련한 별도 기준이 없었다. 아울러 미성년자·장애인 대상 성희롱은 성인 대상 성희롱과 구분해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카메라를 이용한 불법촬영 등에 대한 징계 기준도 새로 만들었다. 미성년자를 성희롱한 경우 과실 정도와 고의성 정도에 따라 최소 정직부터 최고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했고, 소속기관의 성범죄 피해자에게 정신·신체적 2차 피해를 준 경우는 건책부터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내달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를 통해 관련 기관과 국민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처 심사를 거쳐 12월 말까지 개정·공표된다. /한용수 기자

## 사학 교사 채용비리 3년간 20배 ‘폭증’

2014년 3건... 지난해 63건  
‘교육청 위탁채용 제도’ 외면  
시도별로는 대구>경기>서울 順

사립학교 교사 채용 비리가 최근 3년 사이 2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립학교가 신규 교원 선발 절차를 교육청에 맡기는 ‘위탁 채용’ 제도가 있으나 일선 학교에서는 외면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박경미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2017년 시도별 사립학교 교원 채용비리 적발 현황’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교원 채용 비리로 적발된 건수는 93건에 달했다. 2014년 3건에 불과하던 사립학교 교원 채용비리는 2015년 10건, 2016년 17건,

2017년 63건으로 20배 이상 급증했다. 시도별로는 대구가 4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6건, 서울 13건순이다. 인천, 울산, 강원, 전북, 경북, 전남, 제주에서는 사립학교 채용비리가 단 한 건도 적발되지 않았다. 채용 비리가 적발돼 징계조치를 받은 사람은 총 45명으로 경징계 14명, 중징계 31명이었고 행정조치를 받은 사람도 284명이나 됐다. 12명은 임원승인이 취소됐다. 그러나 사립학교법 시행령에 따라, 교원 채용에 필요한 공개전형은 학교 소재 시도교육감에게 위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 위탁채용 제도 참여율은 지난 3년간 평균 30%에 불과했다. 최근 3년간 사립학교에서 채용한 교원은 총 3363명에 달한다. 매년 1100여명을

선발하는 셈이다. 현행 사립학교법 시행령에서는 사립학교도 공립학교와 같이 공개전형을 통해 교원을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형과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임명권자가 정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느슨한 법 규정이 사립학교 채용 비리를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4월 박경미 의원은 사립학교 교원 신규채용 시 공개전형을 해당 학교 시도교육감에 위탁 실시하도록 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박경미 의원은 “전국적으로 연평균 1천명 이상의 사립 교원을 선발하고 있으나 채용비리가 늘고 있어 안타깝다”라며 “채용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사립학교 위탁채용제도 활성화 등 시스템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 세종대 ‘글쓰기 고충’ 상담부터 침삭까지

글쓰기센터, 클리닉 진행

세종대학교(총장 배덕호)는 교내 글쓰기센터가 2018학년도 2학기 글쓰기 전문상담과 클리닉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글쓰기센터는 평소 글쓰기에 어려움을 겪거나 수업 과제물의 수행에 고충을 겪고 있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글쓰기에 대한 전반적인 조언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침삭까지 병행한다.

상담 분야는 크게 일반 상담과 침삭 지원으로 나뉜다. 일반 상담은 글의 큰 틀을 위주로 기본적인 글쓰기의 방법, 내용 구성, 서술 방식, 표현 등을 다룬다. 침삭 지원은 좀 더 세부적인 글인 에세이, 비평문, 독서 논술, 과제 리포트, 보고서 등을 다룬다. 단, 취업 분야의 글쓰기는 제외된다. 상담은 세종대학교 재학생이면 누구나 무료로 받을 수 있다. /한용수 기자

## 중부교육지원청 롯데백화점 본점서 평론가와 영화 이야기

서울특별시교육청 산하 중부교육지원청(교육장 김병오)은 용산구·종로구·중구 관내 학부모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18일 ‘평론가와 함께하는 해설이 있는 영화 V’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12일까지 학습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5차 프로그램은 중부평생교육 후원기관인 롯데백화점 본점 문화센터에서 열린다. 이날 개봉하는 영화 ‘퍼스트맨’을 함께 관람한 후 ‘팟캐스트-영화 남녀’를 진행 중인 한기일 평론가의 평론과 영화 촬영에 얽힌 이야기, 영화 촬영 기법, 영화의 스토리 등을 들으며 영화에 대한 이해도를 높였을 있는 시간으로 마련된다. /한용수 기자

## 교총 “교원 보수, 타 공무원 비해 낮아”

‘교원처우 개선 예산 반영’ 건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2019 교원처우개선 예산 반영 요구 건의서’를 지난 8일 인사혁신처와 기획재정부에 각각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교총 관계자는 “정기국회가 열리는 상황에서 정부 예산과 공무원 인건비를 담당하는 부서에 현 교육 현장의 현실과 처우 등을 알리고, 개선을 촉구했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건의서에서 교원 보수 우대를 규정하는 각종 교육관계법의 입법정신을 구현하고, 교직의 특수성에 부합하는 보상체계를 정립함으로써 학교 교육의 질 제고와 교원 처우 개선을 통해 교원 사기 진작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최근 업무 부담으로 기피업무에 대

한 실질적인 보상기제를 마련해 일선 학교에서 불필요한 갈등을 촉발하는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교총에 따르면, 현행 교원의 보수 수준은 타 공무원 직종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한국교총은 “교직 특수성을 인정받지 못한 채 전체 공무원 인건비 규모에서 보수액과 인상이 결정되는 구조가 교원 보수 우대를 규정하는 교육관계법의 입법 정신을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총이 예산으로 반영해달라는 건의사항은 ▲보직교사 수당 3만원 인상 ▲유치원·영양교사의 원로교사수당 5만원 지급 ▲교직수당 10만원 인상 ▲유치원 원장·원감 직급보조비 신설 ▲교장·교감 직급보조비 현실화 등이다. /한용수 기자